

野,尹 수능 발언에 “학생 등 혼란...대안 밝혀야”

강득구 “복잡한 교육 문제 검사 특유 카르텔로 접근”

홍성국 “교육 문외한 혼수질은 잘못...무대포 지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으로 학생·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어진 문책성 인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에 관해서는 “복잡한 교육계 문제를 검사 특유의 카르텔로 접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질이다.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고 다시 밝혔다. “교육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작년 ‘만 5세 초등입학’을 꺼내 학부모들을 아프게 하고, 올해는 ‘설익은 수능 폭탄’을 꺼내 수험생분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을 문책성 대기발령 냈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수사하듯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복잡한 교육계의 입시 문제를 검사 특유의 카르텔로 이해하고 접근하면서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도함이 또 한 번 등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펼쳐졌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을 문책성 대기발령 냈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수사하듯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복잡한 교육계의 입시 문제를 검사 특유의 카르텔로 이해하고 접근하면서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도함이 또 한 번 등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증거를 즉각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탄하면서 “대통령은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면서도, 변별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대안을 분명히 밝혀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차원의 긴급대책을 세우고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위를 열어라”고 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하도록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국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뭐라고 변명해도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혼수질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대포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 5월 광역단체장 직무평가도 ‘1위’...11개월째



김영록 지사가 민선 8기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11번째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민주당 광주시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회의 참석.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1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광주시 제공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5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한 ‘잘한다’라는 긍정 평가는 62.9%로 가장 높았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취임 첫 달부터 11개월 연속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긍정평가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62.8%), 3위는 김관영 전북지사(57.1%)가 차지했다.

11개월 연속 부동의 1위를 유지 중인 김영록 지사는 민선7기 때도 43개월 중 30번 1등을 차지할 만큼 도민들로부터 직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결과(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2023년 4월26일~5월1일, 5월26일~31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의회, 동부본부 조직확대 조례안 기결...정례회 폐회

전남도의회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37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한 총리 “오명수 관련 괴담·선동 유감...적극 대응할 것”

“의도적 허위유포엔 대응...과학적 정보공개”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관해 “최근 오염수와 수산물 관련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서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금 정부가 관계 부처와 진행하고 있는 일일 브리핑도 그 중 하나고, 여기 더해 국민들이 언제라도 투명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완벽하게 갖추겠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염수 처리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검증·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지난 정부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2021년부터 IAEA 검증 작업에 우리 전문가들이 지속 참여하고 있고, 5월에는 정부 시찰단을 파견하고 해양 방류 안전성 평가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내 연안 해양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고 2011년 이후 국내 유통 수산물 7만 5000여건 검사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한 바 없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이 직결된 물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단체 “전두환 추징 3법 서둘러 통과돼야” 한 목소리

“미납 추징금 922억 환수 위해 국회 나서야”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故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8을 폭동이라 폄하하고 전 재산이 29만엔 밖에 없다’며 유족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호화 생활을 즐겼다”면서 “남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5·18 3대 공법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독립몰수제 도입, 몰수 대상

이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5·18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다. 전두환은 5.18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단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5·18을 폭동이라 폄하하고 전 재산이 29만엔 밖에 없다’며 유족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순교한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오일정신이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혁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에 의대 신설은 공정이고 상식”

의과대 전남유치추진위 “공론화기구에 참여 보장해야”

전남지역 182개 기관·직능·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정 국립의과대학 전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16일 국립의과대 전남유치와 부속 병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너진 상태”라며 “국민 모두는 평등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의료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 정원 확대에 합의하고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신설 불가 입장으로 전남권 의대 설립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헌법에 명시된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연원해 왔지만 전남의 의료현실은 조급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의정협의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된 만큼 의대 없는 전남의 의대신설은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중 무려 17곳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이는 전국 33곳 중 의료시설이 없는 60%에 달한다.

또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공론화기구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200만 전남도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전남권 의대유치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추진위는 “전남지역 거점 의료기관 의료원은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필수요과가 속출하고, 공중보건에는 매년 감소해 도사지역 의료체계는 이미

“국토중주 자선거리길 광주 광산 선정 환영”

행안부 ‘국토중주 자선거리길 140km’ 조성계획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6일 “전국 각지에 국토중주 자선거리길 140km가 조성되고, 정비사업에 광주 광산을 비롯한 영산강 자선거리길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을 통해 도로폭이 좁거나 시설이 낡고 표지판이 부족한 곳의 안전문제를 지적해왔다”며 “탄소중립시대 자선거리길이 마을에서 지역, 지역에서 전국으로 단절없이 연결될 수 있게 자선거리길 뉴딜을 통한 ‘자선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국 27개 지자체를 선정해 8개 신규 노선을 발굴하고, 기존 노선 25곳은 개선기로 확정했다.

한편 ‘자선거리타는 국회모임’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지난해 자선거리 의외도~광주를 3박4일 종단하며 500km 자선거리길을 탐사했다.

광주 광산구 자선거리길은 기존 노선 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3억 5000만원의 지원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자선거리도로 실태 점검

/이동기 기자

특전사회 오일영령 참배...“진정한 사죄부터”

특전사회 회원 4명, 최초 희생자 모친과 5·18 민주묘지 참배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특전사회) 일부 회원이 5·18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을 다시 한 번 참배했다. 앞서 한 차례 특전사회 집단 참배를 막아섰던 광주 시민사회는 “개별 참배까지는 반대하지 않겠다”면서도 진정성은 사회와 진상 규명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백 열사 묘 앞에서는 입 여사와 입고문이 나란히 선 채 함께 묘비를 어루만졌다.

특전사회 일부 회원들은 아마빌레드 오케스트라단과 함께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참배에 동행한 특전사회 회원들은 “행방지를 가족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때 참(진아이) 무자비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등의 발언도 했다.

참배에는 임성록 고문을 비롯한 특전사회 회원 4명, 이형영 단장 등 오케스트라단 단원 8명이 나섰다. 향성 최초 희생자인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가 동행했다.

참배를 마친 입고문은 “오일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공원을 펼칠 오케스트라단 단원들과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향성 정신을 되새겨보고자 민주묘지를 찾았다”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임성록 고문을 비롯한 특전사회 회원 4명, 이형영 단장 등 오케스트라단 단원 8명이 나섰다. 향성 최초 희생자인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가 동행했다. 앞서 참배 갈등을 의식한 듯, 추념담 앞 헌화·분향은 오케스트라단 일동 명의로 진행했다. 이후 참배 일행은 입 여사의 아들인 김 열사의 묘와 백대환 열사 묘, 행방불명자 묘역을 잇따라 찾았다.

특전사회의 5·18민주묘지 참배는 올해 2월 19일과 6월 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사상 첫 참배 당시에는 특전사회 간부진들이 군복 차림으로, 예고 없이 민주묘지를 찾아 ‘도둑 참배’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5·18부상자회·공로자회와 함께 주관한 ‘용서와 화해, 대국민 공동선언식’도 지역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입고문과 이 단장은 참배 내내 입 여사의 양손을 수시로 잡았다.

/김도기 기자

호매민평
이태헌

과연왕이로소이다 무소불위
제대로 말한다면 OUT
수능정책도영광말원전정책때도유기 너도조심해

우월할 인재정책기확관
나가는 상봉부2지관
태헌 기강확립민사관